

올해 수출 목표 7000억 달러 달성... “민관 원팀 총력전”

산업부, 제5차 민관합동 대책회의 정부, 5대 핵심업종 목표 상향 지원 해상물류 등 하반기 4대리스크 관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연초 제시한 수출 7000억달러 돌파를 위한 추가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334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위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감에 따라 역대 최대인 연간 6891억달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권혁용 한화오션 대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이상목 아모레퍼시픽 시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초 제시한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반도체 수출 목표치는 100억달러 올린 1350억달러로, 자동차·부품은 1000억달러(+10억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달러(+14억달러), K-뷰티·K-푸드 230억달러(+8억달러) 등 하반기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인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도록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

용 90조원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지속한다. 수출 조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인증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 해외인증 애로 발생 기업에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제도’(9월)를 신설한다.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를 추진하고,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올림피아와 연계한 K-FISH 홍보회(7월), 하반기 K-푸드플러스 수출상담회(11월)를 개최하고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 선반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하고, 미국 대선과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 대응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기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지”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업 사업재편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

산업부,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대상·범위 등 보강 상시법 전환

기업 사업재편 요건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유형이 신설되고,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당초 올해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과 대상, 범위,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우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현행 5개 사업재편 유형이 6개로

확대된다.

또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돼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이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시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30%) 등 유예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시설·장비의 감축이나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고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은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판정 절차를 면제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도 보강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 지원센터가 지역 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에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평가·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삼성전자가 무상 이전하기로 한 통신·스마트폰·헬스케어 분야 기술과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삼성전자의 나눔 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주요 분야는 통신 124건, 스마트홈·헬스케어 107건 등 총 231건이다.

또 NTB에 등록된 기술 중 공공연구기관의 유상 기술 30건도 함께 소개하고 특허상세정보(SMK)를 제작, 배포했다.

KIAT는 올해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때 신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 기술에 대한 사전 상담 수요를 접수해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 목표나 특허 사용처 등 수요를 확인해 나눔받은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내달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9월 중 이력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NTB 누리집(www.nt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은 유휴 기술 자원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향후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 지도, 지식재산권(IP) 상담 등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자동차 리콜 전 운전자 개별 수리해도 보상” 기업 입사준비, 공무원 인기 제치고 첫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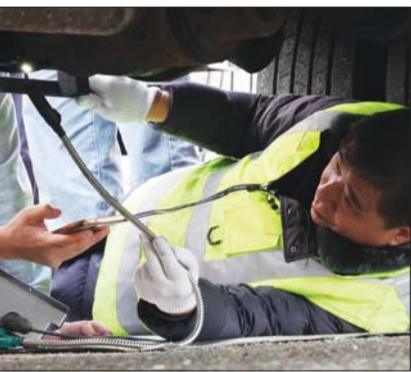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동차 회사가 리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정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 조치(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



지난 2023년 12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통계청, 5월 청년층 경제활동 조사

올해 기준 청년들은 공무원시험보다 기업체 입사시험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2위로 내려앉은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또 졸업 후 첫 취직까지 걸린 기간이 역대 최장인 11.5개월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5월 고용동향 통계에 기반한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9.7%로, 일반직 공무원(23.2%)을 앞질렀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반기업체가 전년동월대비 2.4%포인트(p) 증가한 29.7%로 가장 높고, 일반 공무원은 23.2%로 6.1%p 감소했다”며 “조사가 시작된 2006년도 이래 처음으로 1, 2위 순위가 변동돼 남녀 모두 취업시험

준비 분야 1위는 일반기업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기업과 공무원에 이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8.9%)가 그 뒤를 이었다.

임 과장은 “작년에 남성 같은 경우 일반기업체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여성들은 일반 공무원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올해는 해당 부분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무려 40.7%에 달한 바 있다.

청년들이 졸업 후 임금을 받는 첫 직장에 취직하기까지는 평균 11.5개월이 소요됐다. 지난해에 비해 1.1개월 늘어났고, 조사 이래 최장 기록이다.

졸업 후 3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에 청년 47.7%는 첫 직장을 구했다. 또 절반 이상은 3개월 이상이 걸렸고,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9.7%나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종=한용수 기자